

이론산책

규모의 생산과 정치, 그리고 지구화

박배균

싱가포르 국립대학 지리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서구 지리학계에서 공간에 대한 이론화와 관련하여 새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지리적 규모(scale)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규모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주어지는 지역의 공간적 크기로만 인식되어오면서, 공간에 대한 이론화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도시 및 지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규모의 담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이론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구화라는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도시와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면서 규모에 대한 담론이 공간연구 더 나아가 사회과학의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즉 글로벌이 로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로컬은 글로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의 규모를 정치경제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자본중심으로 추진되는 지구화의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의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기도 하다. 즉 지구화의 진전 속에서 자본은 점차 자신이 활동하는 지리적 규모를 넓혀나가는 데 반해 노동이나 지역공동체는 어떤 지리적 규모에 갇혀 있어서 자본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규모라는 것이 지구화와 관련된 정치적 과정에서 사회세력들간의 권력관계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가 된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회과학적 글쓰기에서 규모의 담론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 추진과 IMF 경제위기 이후, 지구화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와 더불어 규모의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증가해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서구 지리학계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달해온 규모에 사회적 생산론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핵심적인 주장은 지리적 규모는 존재론적으로 주어지는 정태적인 범주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모의 정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구화와 관련된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이 글의 문제제기로서 규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 규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과 규모의 사회적 생산론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규모의 생산이 어떻게 정치적 활동과 연관되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규모의 생산과 정치에 대한 이론들이 지구화의 정치적 과정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논할 것이다.

2. 문제제기: 글로벌-로컬 관계에 대한 이원론 비판

1) 사회과학에서 공간규모론의 발전

사회과학도들이 상이한 공간규모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이는 1970, 80년대 이후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 정치경제학의 이론에 바탕을 둔 비판적 공간연구의 발전, 그리고 1990년대 지구화에 대한 논의의 진전과 같은 것들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등장한 종속이론은 국가라는 지리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발전의 과정이 보다 큰 세계적 규모의 정치경제적 과정에 깊이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 이와 더불어 1970, 80년대의 비판적 공간연구의 발전은 규모에 대한 정치경제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매시(Massey)와 하비(Harvey)의 기여가 중요한데, 매시(1984)는 공간적 분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초지역적(supra-local) 규모에서 조직되는 사회적 관계들이 로컬한 규모의 사회관계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고, 하비(1982)는 자본주의의 지리는 자본이 지니는 모순적 속성에—끊임없이 지역을 넘어 이동하면서 그 교환가치를 창출하려는 속성과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자신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려는 속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의해서 구조지어짐을 밝힘으로써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러 지리적 규모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지구화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나서부터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적 혹은 지역 및 도시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구조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지구화로 불리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구조변화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심화,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포디즘적 조절양식의 쇠퇴 등과 같은 매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국가, 지역, 도시, 그리고

로컬리티 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를—예를 들어, 유럽과 북미의 선진산업국들의 장기적 경기침체, 신보수주의적 정치세력의 득세, 전통적 산업지역의 탈산업화와 실업증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성장, 비전통적 산업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지구의 등장, 세계도시로 불리는 금융 및 서비스 중심지들의 등장 등과 같은—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로 국가, 지역, 도시라는 공간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과정은 보다 큰 글로벌이라는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 틀 속에서 깊이 영향받고 제약받는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로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화살표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반발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소위 ‘로컬리티 연구’가 발전하면서, 도시나 지역이라는 공간적 규모가 글로벌이라는 공간적 규모에 단지 수동적으로 복속되지는 않으며, 로컬리티의 자율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일단의 연구들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들은 글로벌한 규모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국가나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다양함에 초점을 두면서, 이 다양성의 원인이 나름의 역사와 문화의 조건 위에서 국가, 지역, 도시라는 지리적 규모에서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형성된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로컬이 단지 글로벌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독특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적 규모라는 것이다.

2) 이분법의 문제

이와 같이, 국가와 도시 및 지역의 정치경제적 과정의 변화를 지구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시도들을 통해, 규모에 대한 담론들이 풍성해지고 규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다. 그런데 규모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규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들에

서 커다란 인식론적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이다. 즉, 글로벌한 사회적 과정과 로컬한 사회적 과정을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이 서로 반발하거나 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예시한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 하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과 로컬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글로벌과 로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식의 논쟁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들 속에서 글로벌과 로컬은 서로 분리된 대상으로 취급되고, 또 상이한 속성과 기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은 종종 다음에 예시된 것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이분법과 연관된다.

글로벌	—	로컬
구조	—	주체
자본	—	노동
자본	—	국가(또는 지역공동체)
추상	—	구체

이들 이분법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비판은 세이어(Sayer, 1991)와 콕스(Cox, 2002)를 참조하기 바라며, 나는 여기서 글로벌-로컬 관계의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 이분법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글로벌 구조 대 로컬 행위자’

최근의 경제지리 및 정치지리 문헌들에서 글로벌은 구조(structure)적인 것, 로컬은 행위자(agency)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종종 발견된다. 즉,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이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 같은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로컬한 규모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라는 인식이다. 이 인식들 속에서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관계는 구조와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환원되어 인식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글로벌의 로컬에 대한 지배적 우월성을 받아들이고, 반면에 주체의 힘을 강조하는 이들은 로컬의 글로벌에 대한 자율성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정치나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 경향이 뚜렷이 발견된다. 글로벌한 구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변화에 의해 지방정치의 초점이 복지의 제공과 부의 분배에서 경제성장의 추구로 바뀌게 되면서, 보다 기업가주의적인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가 성립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Mayer, 1994; Stoker & Mossberger, 1995). 반면에, 로컬한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각 지역에서 행위자들의 정치적 행동들의 결과로 구성되는 ‘도시체제’(urban regime)의 특성에 따라 지구화의 과정이 각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함을 강조한다(Stone, 1989, 1993; Feinstein et al., 1986). 이러한 글로벌 구조와 로컬 행위자 사이의 대립구도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도 있는데, 로리어(Lauria, 1997) 같은 이들은 글로벌한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조절양식의 변화가 어떻게 로컬한 차원에서 구성되는 도시체제에 의해 매개되어 각 지역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글로벌 구조 대 로컬 주체’라는 이분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먼저, 글로벌 규모의 정치경제적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글로벌 규모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의—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국제기구들, 국제적인 NGO들 등과 같은—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 스케일의 정치경제적 변화들을 구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행위자들의 정치적이거나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로컬한 규모와 관련해서는, 로컬을 행위자들의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로컬한 규모에서 구성되는 사회구조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과 달리 실제로 구조와 주체는 글로벌과 로컬한 지리적 규모 모두에서 존재하고, 또한 구조와 주체 간의 ‘상호구성적’

(mutually constitutive) 과정은 여러 공간적 규모에서 동시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적 규모를 구조나 주체 중의 어느 하나와 연결시키고 이론화를 전개하는 것은 중대한 인식론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글로벌 자본 대 로컬 노동/지역공동체’

또 다른 문제시되는 이분법은 글로벌은 자본(capital)과 결합시키고, 로컬은 노동(labor)이나 지역공동체(community)와 연결시키는 인식이다. 여기서 지구화는 자본의 이동성 증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 기본적인 가정은 자본주의적 경쟁상황에서 자본은 항상 값싼 노동과 자원을 추구하는데, 이 때문에 자본은 항상 자신에게 보다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자본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가 급격한 자본 이동성의 증가와 지구화의 진전이다. 글로벌이라는 지리적 규모는 이와 같이 특정 장소에 고착되지 않는 자본이 움직이는 활동의 장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자본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이나 지역공동체는 특정 장소나 공간적 범위 내에 묶여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로컬이라는 지리적 규모는 이와 같이 장소에 고착되어 있는 노동 또는 지역공동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글로벌과 로컬은 대립되는 이해를 가진 공간적 규모로 인식된다. 이 이분법에 따르면, 글로벌한 규모에서 움직이는 자본은 자신의 이동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로컬한 규모에 고착되어 있는 노동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게다가 노동과 지역공동체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을 자신의 로컬한 규모 내로 끌어들이거나 혹은 묶어두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로컬한 규모의 노동과 지역공동체를 글로벌한 규모의 자본에 더욱 약한 존재로 만드는 조건이 된다고 인식된다.

그런데 자본의 이동성과 노동과 지역공동체의 장소 고착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분법은 자본이 반드시 장소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본이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력, 정보, 기업간 네트워크, 시장 등에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의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즉, 자본 또한 특정의 장소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콕스(1995)에 의하면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주장은 자본이 항상 비용최소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추구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즉, 자본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의 경쟁 방식은 비용최소화뿐만 아니라, ‘강한 경쟁’(strong competition)이라고 불리는 상품의 품질, 디자인의 향상, 신제품의 개발을 통한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자본이 ‘강한 경쟁’을 추구할 경우, 자본은 값싼 노동력이나 재료보다 특정의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노동력을 선호하고, 또한 학습경제에 더욱 의존적이게 된다. 그런데 학습경제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환경이나 특정의 기능을 가진 노동력의 풀 등은 보통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본 또한 그 지역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적 의존성이 큰 자본의 경우, 글로벌한 지리적 규모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로컬한 지역규모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해야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관계를 자본과 노동, 또는 자본과 지역공동체의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이분법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동성과 고착성을 절대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동적이고 어떤 것은 고착적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단지 상대적인 기준으로만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오히려 자본, 노동, 지역공동체 등 이 모든 것들이 특정의 장소에 고착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간적 규모를 가진 지역(혹은 장소)에 고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공간적

규모에 고착되어 있고, 다른 어떤 것은 그보다 작은 도시 차원의 공간규모에 고착되어 있다면, 전자는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에서 ‘입지적 대체성’(locational substitutabi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자보다 이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어떤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인 활동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국제적 활동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그 기업의 활동범위가 유럽 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기업이 개별국가라는 공동체들에 비해서는 더 이동적이라 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국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과 지역공동체가 장소에 고착되어 있어서 자본에 대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 자본이 좁은 지역규모에 고착되어 있는 반면, 노동은 보다 넓은 지역규모에서 조직화되어 자본과 협상을 한다면, 노동이 자본에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물론 노자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이 절대적으로 자본에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동성과 고착성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또한 자본의 활동이나 이동을 조절 또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공동체가 매우 넓은 공간규모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공동체 또한 자본에 비해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3. 규모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최근 서구지리학계에서는 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글로벌-로컬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규모의 문제를 새로이 인식하려는 일련의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입장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실은, 이 두 입장

은 상호보완적이다—하나는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규모에 대한 사회적 생산론이다.

1)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

콕스(2002)는 규모에 대한 이분법적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이나 로컬이라는 용어를 특정의 구체적 공간규모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예를 들어, 글로벌은 국제적인 것, 로컬은 국가 내부의 자그마한 지역적 규모를 지칭하는 것—좀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를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로컬은 글로벌보다 작은 크기의 지리적 규모를, 글로벌은 로컬보다 큰 크기의 지리적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비해 수도권 지역은 보다 글로벌한 공간규모가 될 것이지만, 수도권 지역은 한국 전체에 비해서는 로컬한 지리적 규모가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글로벌하지만,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위에 비해서는 로컬한 규모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은 글로벌과 로컬에 어떤 특정한 기능과 속성을—예를 들어,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글로벌은 항상 움직이는 자본, 로컬은 장소에 고착되어 있는 노동하는 식의—부여하고 나서 규모들간의 관계를 이들 기능과 속성 간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대신에 규모들간의 관계를 이동성과 고착성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큰 지리적 규모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조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보다 작은 규모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조 및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상이한 정도의 이동성과 고착성을 가질 것이다. 규모간의 관계는 이러한 상대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이동성과 고착성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정치적·경제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경우, 전기나 수도회사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특정 지역을 근거로 전기나 수도를 공급하는 장사를 한다. 이들은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완전히 회수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다. 즉, 특정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매우 민감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활동을—예로, 성장연합과 같은—조직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해야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자신들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 인구나 소비가 감소하여 자신들의 시장도 축소된다. 하지만 이들이 장소의존적이거나 고착적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지역개발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종 이들은 그들의 서비스 지역 내에 속해 있는 어떤 하부지역의 지방정부나 성장연합이 추구하는 개발전략에 반대하기도 하고, 무신경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공공서비스 회사들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공간적 규모에서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에 뿌리내려져 있는 행위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이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공공서비스 회사들과 작은 규모 지역의 행위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공간적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이 경우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의되는 이동성과 고착성에서 상이함이 발생하면서, 보다 로컬한 규모와 보다 글로벌한 규모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같은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특정 장소에 뿌리내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해를 가지는 지역의 공간적 규모는 틀리다. 그래서 혐오시설의 건설이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보다 로컬한 규모에 고착되어 있는 하부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주는 혜택을 받기도 싶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지

역에 입지하여 야기하는 각종 부정적 외부효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는 보다 글로벌한 규모와 보다 로컬한 규모 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이렇듯 글로벌과 로컬을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단지 지구화라 불리는 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규모에서 펼쳐지는 정치경제적 과정을 규모의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이나 로컬을 어떤 특정 지리적 규모로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 대해 글로벌한 규모의 것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세계적인 과정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관계, 지역의 규모, 혹은 대도시권의 규모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조와 관계 등 여러 차원의 글로벌한 공간규모가 그들 나름의 보다 큰 입지적 선택성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로컬하고, 더 장소에 고착적인 그 도시의 사회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이 도시라는 규모에 대해 로컬한 규모의 것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도 훨씬 다양하다. 그 도시 내의 구, 동, 혹은 아파트 단지 등에 기반한 행위자들이 보다 큰 장소적 고착성을 바탕으로 그 도시라는 규모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정치적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모들간의 복잡한 역동성은 글로벌과 로컬을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특정한 규모를 사회공간적 이론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지구화나 로컬리티 연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글로벌이나 로컬의 어떤 특정한 지리적 규모에서 형성된다고 믿어지는 사회적 과정, 관계 등에 인식론적 선호를 두면서 이론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구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장 및 통합과정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명제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지구화 과정이 사회, 도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 등을 이론화하려 시도한다.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이런 이론

화의 경향을 통해 생산·재생산되는 것이다. 글로벌과 로컬을 보다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거시적인 사회적 구조는 상당 정도 특정의 공간규모적 틀 속에서 짜여져 있음을 거부할 수 없다. 쉬운 예로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과정의 상당 부분은 국가라는 권력기구에 의존하면서 국민국가의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 중요한 기능은 도시라는 공간적 규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상이한 공간적 규모가—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 가정, 이웃, 동네, 도시, 지역, 국가, 몇 국가의 연합, 글로벌 등과 같은—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들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공간적 틀로써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간규모의 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콕스(2002)는 ‘비판적 리얼리즘’(critical realism)의 틀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공간규모의 속성들과 그들간의 관계들은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범주가 역사적·지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구체화되어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한다. 즉,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틀 안에서 역사적·지리적·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 공간규모의 틀은 상이할 수 있고, 조건이 변하면 규모의 틀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간규모의 기능과 틀의 구체적 표현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모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

2)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규모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간적 규모가 사회적 과정을 통해 물질적으로 또는 담론으로서 구성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 스미스(Smith, 1993), 스윈지도우(Swyngedouw, 1997), 브렌너(Brenner, 2000; 2001), 마스톤(Marston, 2000) 같은 이들은 규모란 존재론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형적으로 정의되는 지리적 영역도 아니라고 하면서, 규모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모는 현실을 인식하는 한 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이 인식의 틀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Delaney and Leitner, 1997: 94-95).

이 장에서 나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규모의 생산을 자본주의 사회의 조절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스윈지도우(1997)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계급간, 성간, 인종간의 갈등·투쟁으로 인한 긴장과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과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그 내적인 질서를 유지해왔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지배와 종속의 형태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을 통해 생산·재생산되고 변형되어왔지만 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가 그 내적으로 가지는 혼돈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통일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데는 조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모의 생산과 변형은 이러한 투쟁과 갈등, 그리고 조절의 과정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조절은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자본이 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의 기술과 속성을 가진 노동력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잉여가치의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도든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력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 교육, 보건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의 축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간의 경쟁, 노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한 경제활동들과 거래관계 등이 나름의 사회적·공간적 틀거리 속에서 짜여지고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는 시장은 이러한 조직화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을 전체적 이해를 위해 조정하는 데 있어 종종 문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사회공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행위자들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조절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절의 행위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행위자들의 정치경제적인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칙, 계약, 관습, 습관, 묵계, 전통, 이데올로기,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하부구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관계들은 하비(1989)가 말한 ‘구조화된 결합’(structured coherence)을 이루면서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하비는 이 ‘구조화된 결합’이라는 용어를 도시나 로컬 규모에서 축적을 위해 구조화되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들을 지칭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하비는 특정의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자본과 자본 사이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공간적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조절되어 자본의 축적을 위한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을—물론 이 통일성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지만—갖추게 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과 규모의 생산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조절의 과정은 항상 특정의 공간적 범위 내에 ‘국지화되어’(localized)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약속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항상 특정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절을 위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로 공간적으로 뻗어나가느냐에 따라 조절의 공간규모가 정해지는 것이다. 어떤 조절의 과정은 도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국가라는 규모에서 작동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뻗어 있기도 하다. 결국 조절을 위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제도적 장치들이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이런 조절이 뻗어가는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규모가 사회적으로 생

산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나 규모의 생산을 조절과정이 공간상에서 펼쳐지는 것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될 수도 있다. 즉, 조절과정이 공간이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절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갈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회관계를 특정의 방향으로 조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이한 이해를 가진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특정 이해집단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이해집단들에 혜택을 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절은 항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행위자들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개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세력들간의 갈등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일이다. 결국 조절의 과정은 특정 이해세력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이해세력들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킴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여 어떤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치적 과정에서 공간과 규모가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조절과정에서 공간과 규모의 정치적 이용은 공간을 이용한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다. 즉, 공간을 이용한 구획화를 통해 그 공간 범위 밖의 세력들과의 차별화와 경쟁을 자극하면, 같은 공간 범위 내 세력들간에는 내적 단합이 도모되고, 이를 통해 특정 방향으로의 조절전략이 쉽사리 받아들여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는 흔히 영역화(territorialization) 전략과도 관련되는데,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 규모 내의 영역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지역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공간적 규모도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스미스(1993)에 따르면, 규모는 경쟁과 협력의 모순적 과정이 지리적으로 해결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규모의 지속적인 생산과 재생산은 상이한 장소들간의 경계를 형성하여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국가라는 규모의 등장은 자본가계급들간의 상이한 이해와 갈등을 영역

적으로 타협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자본가간의 경쟁은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지만, 무정부적인 경쟁은 자본의 지속적 축적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자본가 계급들의 내부적 단합이 필요한데, 국민국가라는 것이 이러한 모순적 과정을 해결하는 한 수단인 것이다. 국민국가라는 지리적 영역 내에서 지배계급은 노동력의 재생산,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 생산과 교환에 필요한 사회 하부구조, 이데올로기적 제도 등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국가영역 밖의 세력과는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스윈지도우(1997) 또한 스미스의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하여, 규모라는 것이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모순된 경향이 일시적 화해를 이루면서, 통제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인식하였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국가라는 공간적 규모에서 자본가들의 협력과 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 규모형성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 뿌리를 둔 자본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다 큰 공간규모를 건설함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힘, 그리고 협력보다는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힘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또한 노동운동이 국가규모로 조직화되는 것도 여러 작은 규모의 노동운동 및 운동세력들 사이의 협력과 경쟁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일이다. 결국 규모라는 것은 협력과 경쟁, 그리고 동질화와 차별화 사이를 매개하는 고리가 되어왔던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간적 규모라는 것은 ① 조절과 관련하여 형성된 여러 “제도들이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범위”와, ② 조절의 정치과정에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한 동질화 또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의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보다는 여러 층위의 상이한 규모들이 어떠한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가이다(Brenner, 2001).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1993)는 자본주의 공간질서가 어떻게 도시, 지역, 국가, 글로벌 등의 상이한 규모의 층위를 통해 구성되는지 논의하는데, 그는 이들 여러 층위의 상이한

규모들이 동질화(equaliz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의 복잡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에 따르면 도시라는 규모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이 지역적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되어 조직화된 결과이다. 반면에 글로벌 규모의 생산은 임노동관계의 보편화 등과 같은 동질화를 향한 자본주의적 힘의 결과로 인식된다. 국가라는 규모는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상이한 자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정 국가라는 공간적 범위 안의 자본들이 지니는 집합적 이해를 다른 국가의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라는 규모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도 국가규모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이라는 규모는 영역적 분업에 의해 형성된다. 경제활동들은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금, 기술 등의 지역간 차이로 인한 공간적 분업의 발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활동의 차별적 집중화가 지역이라는 규모형성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상이하게 형성된 공간규모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계층화되어 보다 작은 크기의 규모들이 보다 큰 규모들에 복종하는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규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중첩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wyngedouw, 1997: 142). 즉 도시나 지역 규모에서의 조절과정이 국가나 글로벌 규모의 조절과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글로벌이나 국가라는 큰 규모의 조절과정이나 사회관계들도 보다 작은 도시나 지역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조절의 과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단지한 규모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찾을 수는 없고 글로벌, 국가, 도시, 지역 등 다양한 여러 층위의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규모의 사회적 생산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특정 규모의 사회적 틀이 영속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규모는 자본주의

축적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을 어떤 특정의 역사적·지리적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만약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이 변화하고 축적의 조건이 변한다면, 조절이 이루어지는 공간규모의 틀 또한 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윈지도우(1997)는 조절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규모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는데, 특히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변화가 ‘지구방화’(glocalization)라고 불리는 규모의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주장한다. 즉, 자본축적의 공간적 규모가 확장되면서 민족국가를 통해 이루었던 영역적 해결은 점차 비효율적인 것이 되고, 다른 대안적 공간규모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보다 글로벌하고 보다 로컬한 규모들이 조절의 과정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규모의 정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둔다. 그리고 조절의 과정은 사회적 약속과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갈등과 긴장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 또는 변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절과 관련된 규모의 생산과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의 권력관계를 생산, 재생산, 변형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권력관계는 어떤 공간규모에서 누가 무엇을 통제하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Swyngedouw, 1997: 140). 예를 들어, 헤로드(Herod, 1997)가 미국 항만노조의 활동을 사례로 잘 보여주었듯이 노동과 자본 간의 노사관계에 관한 협상이 매우 작은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질 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본이 보다 큰 규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자본이 노동에 대해 매우 큰 협상력을 확보하

게 되어 노사간의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때 노동은 자본의 이동성에 대응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편하기 위해 자본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규모를 보다 글로벌한 범위에서 형성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권력관계를 바꾸려는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공간의 규모를 재조직화하거나 재편성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력의 획득을 위해 규모를 생산하고 변형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 및 과정을 가리켜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라고 한다.

규모의 정치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규모 뛰어넘기’(jumping of scale)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와 과정들이다. ‘규모 뛰어넘기’란 특징의 사회세력들이 권력투쟁 과정 속에서 기존 규모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글로벌하거나, 또는 보다 로컬한 새로운 규모를 창출함을 통해 기존의 권력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말한다.

콕스(1998)는 이 ‘규모 뛰어넘기’를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과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이라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의존의 공간’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하고 있을 때, 이 사회적 관계들이 뻗어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에 구인과 구직을 의존하고 있을 때, 이 노동시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의존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의존의 공간은 스미스가 말한 공간에 대한 차별화의 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존의 공간은 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 이 넓은 범위에서 정의되는 사회관계와 과정들은 그 동질화의 경향을 바탕으로 공간의 차별화를 통해 형성되는 의존의 공간을 끊임없이 해체시키려 한다. ‘의존의 공간’에 자신의 이해의 실현을 의존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이 의존의 공간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의존의 공간을 뛰어넘는 정치적 연대와 네트

워크의 형성을 통해 다른 공간적 규모에 있는 행위자들이나 권력을 동원하려 한다. ‘연대의 공간’이란 이러한 정치적 연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콕스에 의하면 ‘규모 뛰어넘기’란 어떤 장소에 기반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장소의존적인’(locally dependent)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의존의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공간 규모에 있는 행위자들과 ‘연대의 공간’을 형성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규모 뛰어넘기’ 전략은 특히 피지배계급에 의해 기존의 권력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는 하나의 저항전략으로 많이 이용된다. 요나스(Jonas, 1994)에 의하면,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통제가능한 규모에 묶어둠으로써 그들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도록 노력하지만, 반면에 피지배계급은 다른 규모에서의 권력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그렇게 강요된 규모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자본의 지구화 경향에 대한 한 저항전략으로 노동운동이나 여타 사회운동세력들이 기존의 국가나 지역의 규모를 뛰어넘어 보다 글로벌 규모에서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규모 뛰어넘기’ 전략이 단지 피지배계급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한 수단으로 기존의 규모를 뛰어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U, NAFTA, WTO 등의 설립과 같은 최근의 지구화 흐름들은 기존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나 케인즈주의 개입국가의 틀 속에서 갇혀서 노동에 대한 주도권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던 서구 선진제국의 자본이 기존의 민족국가적 규모의 틀을 뛰어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 새로운 규모를 창출하여 보다 친자본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규모 뛰어넘기’ 전략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규모 뛰어넘기’ 전략은 자본이나 노동,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서로에 대한 경쟁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규모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큰 규모의 공간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 뛰어넘기’ 전략을 항상 보다 큰 규모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과정으로만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규모 뛰어넘기’는 ‘규모확대’(upscaling)뿐만 아니라 ‘규모축소’(downscaling)까지 포함하는 전략이다. 즉, 콕스의 용어를 빌면, 연대의 공간을 의존의 공간보다 더 큰 규모에서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의존의 공간보다 작은 규모에서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구화와 관련하여 자본은 기존 국가규모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조절의 과정을 더 작은 공간규모인 도시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을 통해 지역간 경쟁을 심화시켜, 노동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기도 한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지구화 시대 진보적 공간 정치를 위한 실천적 함의

나는 이제까지 규모에 대한 서구 지리학계의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글로벌과 로컬에 대한 이분법이 지니는 문제,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의 필요성, 규모의 사회적 생산론, 그리고 규모의 정치에 대해 논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규모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글로벌과 로컬은 보다 추상적이고 상대주의적 범주로 이해해야만, 규모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규모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규모는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특히 조절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도가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범위, 그리고 조절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간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규모는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그런데 이 규모 생산의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다.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세력들이 권력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모의 정치’를 통해 규모를 재조직화하거나 재편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런데 규모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구화라는 정치적이고 담론적인 물결을 맞이하여 진보적 공간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이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먼저 지구화라는 담론 또는 정치적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으로, 지구화에 대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정치적 반응이 존재한다. 먼저 지구화를 옹호하면서 국가 또는 지역 밖에 있는 글로벌한 규모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로컬한 행위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화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에 맞추어 국가나 지역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구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악의 근원은 자신들의 국가나 지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 힘들을 차단해야만 진정한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정치적 반응들에서 글로벌한 것과 로컬한 것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고, 심지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규모에 대한 상대주의, 규모의 사회적 생산론 등을 바탕으로 본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화라는 프로젝트는 글로벌이라는 큰 공간 규모에서 벌어진 사회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서 국가나 지역이라는 규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공간규모에서 사회세력들간의 투쟁과 갈등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규모 정치의 결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이 자신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노동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규모에서 규모 생산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왔고,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본중심적 지구화라는 담론과 프로젝트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본중심의 지구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국가에서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

분절된 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항의 세력들이 보다 큰 진보적 규모 생산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 생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구화는 하나의 버전(version)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화는 자본이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이다. 하지만 이 규모 생산의 과정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진행중이다. 따라서 글로벌이라는 공간의 규모를 보다 진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어떻게 노동과 다른 저항의 세력들이 보다 진보적인 담론과 제도의 틀을 담아 대안적인 글로벌이라는 공간규모를 창출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구화는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박배균 baegyoon@hanmail.net

참고문헌

- Brenner, N. 2000, "The Urban Question as a Scale Question: Reflections on Henri Lefebvre, Urban Theory and the Politics of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pp.361-378.
- _____. 2001,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 Cox, K. R. 1995, "Globalisation,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Urban Studies*, 32(2), pp.213-224.
- _____. 1998, "Spaces of Dependence, Spaces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17(1), pp.1-23.
- _____. forthcoming. 2002, "The Local and the Global," in P. Cloke and R. J. Johnston(eds.), *Human Geography's Binaries*, Sage Publications.
- Delaney, D. and Leitner, H. 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 pp.93-97.

- Feinstein, S. S. et al.(eds.) 1986, *Restructuring the City: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 Redevelopment*, New York: Longman.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The Urban Experience*, Oxford: Basil Blackwell.
- Herod, A. 1997, "Labor's Spatial Praxis and the Geography of Contract Bargaining in the US East Coast Longshore Industry, 1953-1989," *Political Geography*, 16(2), pp.145-169.
- Jonas, A. 1994, "Editorial: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2, pp.257-264.
- Lauria, M.(ed.) 1997, *Reconstructing Urban Regime Theory: Regulating Urban Politics in a Global Economy*, Thousand Oak: Sage Publications.
-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pp.219-242.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r*, London: Macmillan.
- Mayer, M. 1994, "Post-Fordist City Politics," in A. Amin(ed.), *Post-Fordism: A Reader*, Oxford: Blackwell, pp.121-149.
- Sayer, A. 1991,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283-308
- Smith, N.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pp.87-119.
- Stoker, G. and Mossberger, K. 1995, "The Post-Fordist Local State: The Dynamics of its Development," in J. Stewart and G. Stoker(eds.), *Local Government in the 1990s*, London: Macmillan, pp.210-227.
- Stone, C. N. 1989,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_____. 1993, "Urban Regimes and the Capacity to Govern: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ournal of Urban Affairs*, 15(1), pp.1- 28.
-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K. R. Cox(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New York: Guilford, pp.137-166.